

“관세인상 영향 2분기부터… 美 공장 건립은 마지막 수단”

조주완 LG전자 CEO

“운영효율화로 관세 최대한 수용
감내 어려울때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으로 대응”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 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조 CEO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전기·정보공학부 대상 특별 강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인상 폭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미국향 가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실적이) 악화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2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 시행 전 제품을 미리 사두는 ‘풀인 효과’는 1분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조주완 LG전자 CEO가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LG전자

설명했다.

제품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며 “운영 효율화나 재고 순환 등을 통해 (관세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CEO의 발언은 10% 수준의 기본 관세는 운영 효율화와 재고 순환 등 내재화된 역량을 통해 감내할 수 있지만, 관세 인상 폭이 커질 경우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멕시코에서는

냉장고·조리기기 등 생활가전과 TV를, 베트남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는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활용, 가격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는

유예했지만,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조 CEO는 생산지 변경이나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 기지 건립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4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도 “생산지 최적화 측면에서 관세 인상 회피가 가능한 멕시코, 미국 생산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윙 생산 체제를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7398억원, 영업이익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 조 CEO의 발언처럼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가 본격화하는 2분기에는 관세 영향 등으로 실적이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韓 헌법·법률 따라 질서있게 국정운영”

최상목 부총리, 美 무디스 총괄 면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방미 기간 중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나,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면담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일 화상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과면·대선 등의 절차가 일련의 질서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무디스에 전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디론 글로벌총괄은 또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한미 간 통상협약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 출국한 바 있다. 방미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美·中 갈등에 韓 기업 53% 공급망 악화”

무협, 韓기업 공급망 리스크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상호성 있는 정책금융 추진,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책 수립 2.4%
韓기업, 양국 무역제재 애로사항
‘환율 변동’ 원재재값 상승 64%
조달·수출처 다변화 전략 등 제안

최근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2024년 12월 제3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용도 품목의 역의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난 3월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협조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통제 강화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매

우 높음에 산화텅스텐(80.4%), 탄화텅스텐(91.4%), 몰리브덴 괴(99.7%), 희토류 화합물(61.1%), 희토류 금속(79.8%)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중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제조기업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3.4%가 전년 대비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1.8%)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기업들이 추진 중인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수급처 다변화 모색(64.7%)’,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42.6%)’ 등이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양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애로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63.4%)’을 가장 먼저 꼽았으며 ‘원자재·중간재수급(42.4%)’,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통관 지연(2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등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은 복수응답을 허용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조달처·수출처 다변화 등 수급처 다변화 전략 강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G2G 자원 협력 확대 ▲양국 제재 충돌 대비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우선적 정책금융 확대 등 4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진실 선임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 가능성이 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7월 패키지 목표, 관세면제 협의 진행”

안덕근 산업장관

조속한 시일내 한미 실무협의 하기로
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주제

한미 양국이 미측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의를 3개월 유예기간 내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 등 일체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도 조만간 개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약’에 이어 통상 당국간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사진)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



다”며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8일 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협력, 통화정책 등 4가지로 모아졌다. 안 장관은 “(협의 분야와 방식은)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측의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다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며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약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오는 5월 15일~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의 고위급 통상협약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 통상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협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